

1번-정답④

A는 좁은 의미의 정치, B는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정답

④ B는 A와 달리 여름고등학교 학급회의 활동을 정치라 본다.

오답

- ①.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한건 B이다.
- ②. B도 국회의 입법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 ③ B는 A에 비해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한 것은 B이다.

2번-정답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⑤ A와 B 모두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오답

- ① 위헌 법률 심사제는 B의 실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② B는 법률 제정 과정의 합법적 절차만을 강조하지 않고 목적과 내용도 강조한다.
- ③ A는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한다,
- ④ A, B 모두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3번-정답⑤

기본원리 A는 국제 평화 주의이다.

정답

⑤A의 예시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적절하다.

오답

- ① 국가가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 ② A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금지하지 않는다. 방어적 전쟁은 가능하다.
- ③ 실현 방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는건 자유 민주주의이다.
- ④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4번-정답③

밑줄 친 A의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정답

- ㄱ.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ㄴ. 현대 복지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오답

- ㄷ.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5번-정답 ⑤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A국은 의원 내각제이다.
 T-1시기와 T시기의 정부 형태는 같으니 T시기에서 정부형태는 변경되지 않았다.
 또한 T~T+3시기에 정부 형태가 2회 변경되었다.

(1) T+1시기,T+2시기에 정부 형태 변경

T-1시기	의원 내각제
T시기	의원 내각제
T+1시기	대통령제(1회변경)
T+2시기	의원 내각제(2회변경)
T+3시기	의원 내각제

(2) T+2시기,T+3시기에 정부 형태 변경

T-1시기	의원 내각제
T시기	의원 내각제
T+1시기	의원 내각제
T+2시기	대통령제(2회변경)
T+3시기	의원내각제(2회변경)

위 표를 참고하면 T+1,T+2 시기의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T+3시기에서 A국은 항상 의원 내각제이다.
 또한 추가 정보없이 T+1시기와 T+2시기는 주어진 내용으로 추론 할 수 없다.

정답

- ⑤ T+1시기가 의원 내각제라면 ㉠에 들어 '예'가 들어갈 수 없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했다. B,C,D당이 연합하면 50% 50%이다.

오답

- ① T시기에 어느 정당도 과반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 했으니 ㉠에는 예가 들어간다.
 ② T+3 시기에 A국은 의원 내각제이다.
 ③ T+2 시기에서 A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T+1시기는 대통령제이니 내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T시기와 T+3기 모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 아니다.

6번-정답 ②

A:대통령, B: 국무총리 C;국무회의 D:국회 E:대법원 F:감사원이다

정답

② D는 A의 조약 및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오답

① C는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 아닌 심의 기관이다.

③ D의 국무 위원의 해임 건의안은 A에게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F는 E의 장(長)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 재판소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⑤ D는 결산 심사권, F는 결산 검사권을 가진다.

7번.-정답 ③

A:시민단체 B:이익단체 C:정당

정답

③ C는 A, B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

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하기도하는 집단은 B이다.

② B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A, B, C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⑤ A, B, C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의 기능을 담당한다.

8번.-정답 ②

A:현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B:성문 법률주의(=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C: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 불소급 원칙)

정답

ㄴ. B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오답

ㄱ. A는 현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다.

ㄷ. 범죄자에게 C가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면 C를 적용할 수 있다.

9번.-정답 ④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지방 노동 위원회가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편을 들어준 것을 고려한다면 회사가 갑을 해고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A씨의 편을 들어준 것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적법한 이유없이 승진을 제한했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을와 병의 아르바이트 계약에서

을은 소정 근로 시간 9시간 휴게 시간 60분을 보장받았다.

병은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휴게 시간 60분을 보장받았다

정답

④ 을과 병의 근로시간과 주휴일 모두 근로 기준법에 위법하지 않다.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휴게시간)이다.

을은 18세이니 성인과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즉,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니 적법하다.

병은 17세이지만 일 7시간 주 35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니 적법하다.

오답

①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을 것이다.

②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결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

⑤ 병은 합의가 있었다면 1일 1시간의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10번-정답 ㉔

A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정답

㉔ A는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고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보장된다.

오답

- ① 개인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 ②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 ③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 및 생명의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는 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 ④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11번-정답 ㉒

A는 동의서를 위조했으니 A와B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갑은 A가 미성년자임을 계약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으니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갑이 A를 속여서 숙박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받았으니 사기에 해당한다.

정답

- ④ A는 동의서를 위조했었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지만 갑의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오답

- ① 갑은 계약당시 A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기에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② 계약이 확유 되었기에 동의를 촉구할 필요가 없고 동의를 촉구하더라도 동의를 A가 아닌 B에게 촉구할 수 있다.
- ③ B는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으나 A가 동의서를 위조하였으니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 갑에 대한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B는 갑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번-정답 ④

정답

④ ㉠에서 정이 A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정은 재산은 1;1.5 비율로 을에게 9억원 A에게 6억원이 상속되고 A는 일반 입양이니 갑과의 친족관계과 유지된다. 따라서 A의 재산은 A의 부모인 갑과 을에게 1;1 비율로 3억원씩 상속된다. 즉, 을은 정으로부터 9억원 A로부터 3억원을 상속받았으니 상속액은 12억원이다.

오답

- ① ㉡는 형식적 요건이다.
- ② ㉢은 숙려기간을 필수로 거쳐야한다.
- ③ ㉣에서 정과 C의 친족관계는 단절된다.(친양자 입양은 친족관계 단절)
- ⑤ ㉤에서 A가 정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을의 상속액은 25억이다.
A가 먼저 사망한다면 을은 A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13번-정답 ②

A가 의결 기관 B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한다는 사실로 추론한다면

A:지방 의회

B:지방 자치 단체의 장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은 중대 선거구제로 선출한다.

정답

- ② A는 예산안 결산 심의권을 가진다.

오답

- ① A는 조례를 제정하고 B가 규칙을 제정하나.
- ③ 의결 기관으로 조례를 제정하는건 A이다.
- ④ A와 B는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이다.
- ⑤ 비례 의원을 제외한 A와, B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14~15]

A는 구속되었으니 영장 실질심사를 거쳤을 것 이고 기소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B는 구성 요건은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병은 책임이 조각된 것이 아니라 책임이 감경되어 감형을 받은 것 이다.

14번-정답 ㉔

정답

- ㄱ.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 ㄴ. A가 기소 전이라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B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 ㄴ. A가 피고인 신분이라면 기소가 된 이후이니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병은 책임 조각이 아니라 책임 감경으로 형량이 감경되었다.

15번-정답 ㉔

정답

- ④ 판사는 ㉑이전에 필수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오답

- ① 재판부는 병에게 보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② 감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 ③ A는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일 때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B는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6번-정답 ②

갑이 항소심을 진행하던 도중 ㉠을 제청하였으니

A는 지방 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다.

갑이 ㉠이 기각당하자 B에 ㉡을 신청했으니 B는 헌법재판소이고

㉡은 위헌 법률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또한 A와B 모두 기각 판결을내리면서 동일한 판단을했다.

A:지방 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B:헌법재판소

㉡ :위헌 법률형 헌법소원 심판

정답

② A는 B에 직권으로 ㉠을 신청할 수 있다.

오답

①,③,⑤(설명 생략)

④ 갑은 B의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17번-정답 ③

A는 교사자이다. 교사는 방조자이다.

갑,을,병 모두 구성요건이 성립하고 위법성도 성립한다.

갑은 강요에의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었다.

병은 형사 미성년자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이 조각되었다.

정답

③ 교사와 A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이다.

-교사자와 방관자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이다.

오답

① 갑만 범죄가 성립한다.을 병은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② 정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도 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④ 정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회복시키는 걸 원칙으로 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번-정답 ④

A:총회 B:안전 보장 이사회 C:국제 사법 재판소 ㉠ :조약 갑국:상임 이사국

정답

④ 갑국은 상임 이사국이다.

오답

- ① A에서는 표의 등가성 원리가 실현된다. 실현되지 않는 건 B이다.
- ② B는 실질적 의결 기관이고 형식적 의결 기관은 A이다.
- ③ C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⑤ 조약는 제한적 구속력을 가진다.

19번-정답 ①

A:현실 주의적 관점 B:자유 주의적 관점

정답

① A의 예시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들 수 있다

오답

- ② A는 국제 상황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라고 본다.
- ③ A, B 모두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A는 B와 달리 동맹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B는 A와 달리 집단 안보 체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동맹≠집단 안보체제

동맹은 어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략이다.(=A의 관점)

집단 안보 체제는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 체제 내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체제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침략자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체제이다.(=B의 관점)

20번-정답 ③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를 통해서 갑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걸 알 수 있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비례대표 의석수	50	26	2	22
지역구 의석수	82	76	28	14
총 의석수	132	102	30	36
의석률	44%	34%	10%	12%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구 의석률	41%	38%	14%	7%
정당 득표율	44%	34%	10%	12%

정답

- ㄷ.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획득한 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ㄹ. 비례 대표 의석을 두 번째로 많이 획득한 의석은 B당이다.

오답

- ㄱ. 원내 1당(=A당)과 원내 4당(=D당)의 의석수 차이는 96석이다.
- ㄴ. 갑국은 최근 실시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 는 중대 선거구제이다.